

미국 인프라 투자안 합의 내용 및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영교 (yoonyk@kdb.co.kr)

- ◆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'21.4월에 제안한 장기 인프라 투자안 중 노후화가 심각한 전통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안 합의에 도달
- ◆ 미국 의회의 현행 의석 구성상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최초 원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결국에는 관철될 전망이다, 예산 조정과정상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어 실제 예산집행 시점은 다소 유동적

□ 미국 민주·공화 양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'21.4월에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3개월여의 협상을 거쳐 일부 합의에 성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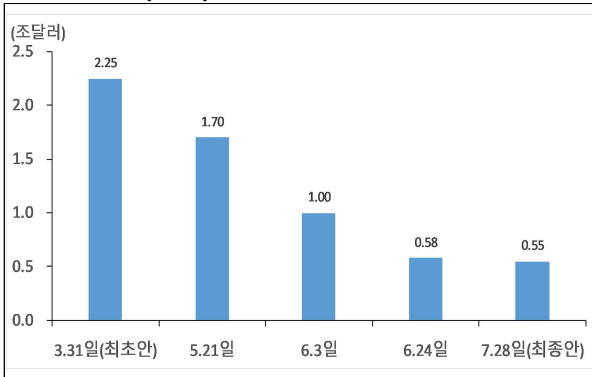
- '21.4월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미국의 인프라 장기(長期) 개선 목표를 담은 "American Jobs Plan(1차, 물적 인프라)"과 "American Families Plan(2차, 인적 인프라)"을 발표
 - 당초 제시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안은 각각 2.25조달러(American Jobs Plan)와 1.73조달러(American Families Plan) 예산안으로 총합 약 4.0조 달러 규모
 -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인화된 법인 및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다시 인상함으로써 주요 재원을 조달할 계획
 -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인하(35%→21%)했던 법인세율을 28%까지 되돌리고, 고소득자(연소득 40만 달러 이상) 소득세 최고세율을 39.6%(현행 37%)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향후 15년간 필요 재원을 충당
 - 야당인 공화당은 노후화가 심각한 전통 인프라 재건 필요성에는 동의하나
 - ①미국 재정건전성 악화와 ②팬데믹 국면에 기업 증세로 인한 기업 재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
- 민주·공화 양당 의원의 초당적 합의(찬반 69:30)로 전통 인프라 부문 투자를 위한 약 1.2조달러(기책정예산 6,300억달러+금번 합의예산 5,500억달러) 규모의 인프라 재정안이 상원을 통과
 -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인프라 투자안(총 2.25조 달러) 중 심한 노후화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예산 투입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전통 인프라 부문 투자 예산만 구분하여 합의에 도달

- 이번 합의안은 기존 전통 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(Baseline)*에 5,500억달러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, 하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'22년 회계연도('21.10월~)부터 집행 가능

* 백악관(The White House)에 따르면 기존에 이미 책정되어 있던 전통 인프라 부문 투자 예산(Baseline)은 향후 5년간 약 3,900억달러, 또는 향후 8년간 6,300억달러 규모이며, 금번 합의된 신규 사업예산 5,500억달러를 추가하여 전통 인프라 부문 총예산액이 각각 9,400억달러와 1조 1,800억달러로 최종 책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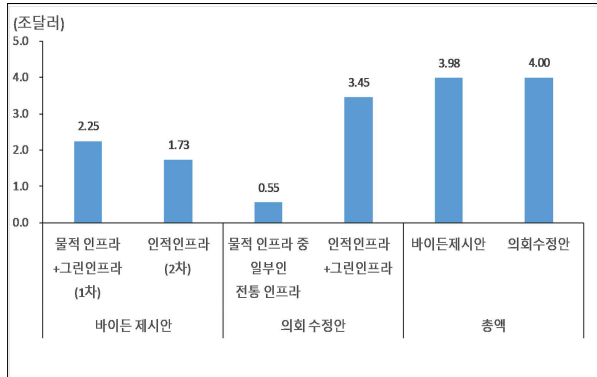
- 1차 인프라 투자원안에 포함된 사업 부문 중 이번 합의안에서 배제된 그린 인프라 투자 예산은 2차 인프라 투자안으로 이동 편입되어 의회에서 심의될 전망

바이든 1차(물적) 인프라 투자안 규모 변경 과정



자료 : 언론 종합
 주 : 바이든 1차(물적) 인프라 투자 원안(American Jobs Plan)은 당초 전통 인프라 및 그린 인프라 투자를 망라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전통 인프라 부문으로 축소

바이든 인프라 투자안 변경 내용



자료 : 언론 종합
 주 : 1차(물적) 인프라 투자안에서 배제된 그린 인프라 부문 투자 계획은 2차(인적) 인프라 투자안으로 이동

바이든 1차(물적) 인프라 투자안 예산투입 분야

(단위 : 억달러)

분야	세부 부문	투입 예정 예산	
교통, 도로 등	도로 및 교량	1,100	
	철도	660	
	공공교통	390	
	공항	250	
	항만 및 수로	170	
	전기차	150	
	도로안전망 구축	110	
	유틸리티	전력 인프라	650
		브로드밴드(통신 인프라)	650
		수도 인프라	550
재생에너지		470	
	기타	350	
	총액	5,500	

자료 : 언론 종합

□ 바이든 대통령의 1차(물적)·2차(인적) 인프라투자안은 결국 당초 원안 규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, 다만 최종 타결까지는 정치적 진통 불가피

- 최초 “1차(물적) 인프라 투자안(American Jobs Plan)”에 포함된 항목 중 전통 인프라 외 부문 예산은 “2차(인적) 인프라 투자안(American Families Plan)” 예산과 통합하여 여당(민주당) 단독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 우세
 - 미 의회 예산안 통과 요건이 상원은 60석 이상(총 100석) 찬성인 반면, 하원은 과반 찬성이므로, 현재 과반 이상인 민주당 의석(총 435석 중 220석)만으로도 이번 합의안은 통과 가능
 - 민주당은 “1차(물적) 인프라 투자” 원안 예산 중 금번 합의 제외된 예산과 “2차(인적) 인프라 투자” 원안 예산을 통합한 2차 인프라투자 조정안을 예산 조정절차*를 활용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
 - * 세출(Spending), 세수(Revenue), 연방부채한도(Federal debt limit) 안건에 국한해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60석이 아닌 단순 과반인 51석 찬성으로 예산안 통과 가능
 - * 현재 상원의 민주당 의석수는 50석이며 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므로 과반인 51석 동원 가능
-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논란과 법안 처리절차 등을 두고 여당(민주당)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
 - 법인 및 고소득층 대상 증세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근 정부 부채한도 문제에 따른 적정 재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당내에서도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이견이 대립
 -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3.45조달러 규모로 조정된 2차(인적) 인프라 투자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금번 1차 투자 합의안과 동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므로, 최종 투자안의 내용과 실제 예산집행 시점이 상당폭 유동적이란 견해가 우세